

20여 년 만에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 외부전문가·시민사회가 원점에서 사업성과 점검, 통합평가를 지출효율화·국민감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현행 '각 부처 - 기획처'로 이원화된 평가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
- 시민사회가 평가단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안에 체계적으로 환류
-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은 매년 1/3→전체사업으로 확대하여 관리 강화
- 성과계획서는 국회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AI 활용으로 성과 정보의 질 제고

기획예산처는 금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6.1.27.(화)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동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6년에는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새 정부 핵심 과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재는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함에 따른 관대화 경향 등으로 신뢰성·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지출구조조정에 환류 등 실효성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총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 내외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위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는 명확히 유형화**하여 성과 부실 사업은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용에 환류를 강화하고, 평가 보고서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감시·견제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체감형 사업 등 성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포상 등을 추진하여 성과제고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한다.

* 미흡사업 선정 비율: (도입 초기, '09~'13년) 23.6% → (최근, '21~'25년) 15.7%
지출구조조정비율: (도입 초기, '09~'13년) △12.1% → (최근, '21~'25년) △5.2%

** (부처 자체평가)우수/보통/미흡 → (통합평가)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이와 함께,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용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외에도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성과계획서** (예산안 첨부서류)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하고, 성과관리 우수 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하여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하여 방대한 성과관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 성과관리 질도 함께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면서,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 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여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	책임자	과장	이지원 (044-214-3210)
		담당자	사무관	최우리 (woori19@korea.kr)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성과제도혁신과	책임자	과장	권기정 (044-214-323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misjuly@korea.kr)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재정사업심층평가팀	책임자	팀장	정민형 (044-214-3360)
		담당자	사무관	한우리 (skyhan1023@korea.kr)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제도팀	책임자	팀장	박주언 (044-214-3350)
		담당자	사무관	황지은 (andante2004@korea.kr)
			주무관	함영준 (hssr9632@korea.kr)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주요내용

2026. 1

기 획 예 산 처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3
III. 2026년 중점 추진과제	4
1. 재정사업 성과평가	4
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4
② 보조사업 연장평가	6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	6
④ 기금평가	7
2. 성과목표관리	7
3. 성과관리 인프라	8

I. 추진 배경

□ 국가재정법('21.12월 개정)에 따라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2.8)을 토대로
「'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 국가재정법 제85조의4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의무지출·미래대비 투자 등 지출 소요는 지속 증가하나, 성장률 둔화 등 세수기반 약화로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

○ 급변하는 대외환경 대응, 저출생·저성장 극복, 민생경제 회복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

⇒ 체계적 재정성과관리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핵심과제 지출 소요를 뒷받침할 재정여력 확보가 필수적

□ 「'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성과관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에 환류를 강화하고, 성과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중점

○ 이를 위해, 독립적·객관적 성과검증 및 관리체계를 구축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2~'26년)
→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6.1월 발표)”**

재정사업 성과관리

성과목표관리

- ① **성과계획서**
 - 차년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목표 설정
 - *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② **성과보고서**
 - 전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미흡원인 등 보고
 - * 결산보고서 구성항목으로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재정사업 성과평가

- 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성과 등을 중립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
- ② **개별부처 주관 평가**
 - 복권기금평가(기획처), R&D평가(과기부), 재난안전사업평가(행안부), 균형발전사업평가(지방위), 일자리사업평가(노동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 ③ **보조사업 연장평가**
 - 보조사업 실효성 등 평가('16~)
 - * 평가결과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 ④ **재정사업 심층평가**
 - 객관적 성과검증 필요 사업군 심층 분석('05~)
- ⑤ **기금평가**
 - 기금 운용 및 준치 타당성 평가('00~)
 - * 평가결과는 국무회의 보고 후 결산 보고서와 함께 국회 제출

성과관리 인프라

- ① AI기반 성과관리 도입
- ② 성과관리 정보 공개 강화

Ⅱ.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최종 목표

- ◆ 독립적·객관적 성과관리 체계 확립
- ◆ 성과관리 내실화로 재정운용에 환류 강화
- ◆ 성과관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재정 책임성 제고

추진 과제

1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신설)

- 부처·재정당국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부처합동 「통합평가」로 일원화
- 통합평가를 「체계적 예산환류 및 국민감시 플랫폼」으로 활용

2 보조사업 연장평가

- 통합평가로 평가중복 방지
- 평가주기 단축(3년→매년)으로 관리 강화

3 재정사업 심층평가

- 다부처·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대상사업 선정
- 증거 기반 평가 고도화

4 기금평가

- 기금 자산운용 관리 강화
- 기금 자산운용의 공공성 제고

5 성과목표관리

-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점검
- 예산심사시 필수 재정정보 확대

6 성과관리 인프라

- SI기반 성과관리
- 성과목표관리 정보 대국민 접근성 강화

Ⅲ. 2026년 중점 추진과제

1. 재정사업 성과평가

◇ 현행 객관성·실효성이 낮은 성과평가 제도를 개편하여, 「지출효율화 및 국민 감시 플랫폼」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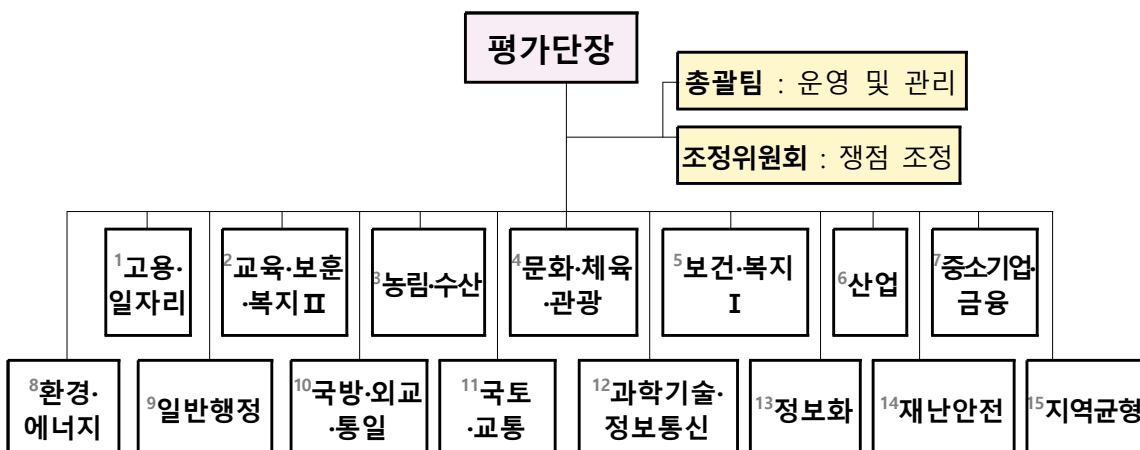
1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26.1~) 신규

① 「부처·재정당국 이원화」된 현행 평가를 부처 합동 평가로 일원화

- (평가방식) 「부처 자체평가 → 기획처 확인·점검」의 이중 평가 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로 일원화
- (평가대상) 성과관리가 필요한 주요 재정사업(세부사업 원칙)
- (평가단) 15개 분야, 총 150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개별평가 주관부처(행안부·지방위) 등도 함께 평가에 참여

* 보조사업평가 통합실시를 위한 평가위원 약 30명 포함

< 평가단 구성(안) >



- (평가항목)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및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를 종합 평가

2 범부처 합동 + 시민사회가 평가에 참여

- (각 부처) 평가 전 과정에 소관부처 참여 및 부처별 정책방향 반영
 - 평가단 구성시: 부처별 추천인사를 반영하여 분야별 전문성 보완
 - 부처별 투자방향: 각 부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 확인·점검 결과와 정책 우선순위, 차년도 중점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시 반영
 - 평가과정: 평가 단계별 소관부처 설명·의견 청취절차 부여
 - 평가결과 환류: 각 부처는 투자 우선순위와 최종 평가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예산요구안에 반영
- (시민사회) 평가단의 10% 내외를 시민사회,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선정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낭비·비효율성을 평가

3 「체계적 예산환류 및 투명한 국민감시 플랫폼」으로 활용

- (환류) 평가결과를 명확히 유형화*하여 예산에 직접 연계
 - * (부처 자체평가)우수/보통/미흡 → (통합평가)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 성과 부실사업은 원칙적 삭감하되 취약계층지원·의무지출 성격 등 감액이 곤란한 경우는 사업운영비 등 페널티 부여
 - 성과 우수사업은 증액 권고, 차년도 평가유예 및 담당자 포상* 추진
 -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
 - ** 국민체감형 사업을 국민 눈높이에서 심사하고 포상하는 방안 추진
- (평가결과 공개) 투명성 제고로 국민감시·견제기능 극대화
 - 평가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부처별) 등을 ‘열린재정’에 모두 공개

4 개별법상 평가와 연계 운영 강화

- 평가대상 중복 및 부처 평가부담 최소화, 평가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위해 개별평가를 통합 성과평가와 연계·통합 운영
 - (보조사업 연장·복권기금평가(공익지원)) 통합 성과평가에 통합하여 실시
 - (일자리사업·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평가간 상호 연계·보완
 - (재난안전·균형발전사업평가) 정책성 평가 성격으로 차별화

2

보조사업 연장평가('26.1~)강화

□ 연장평가 주기 단축(3년→1년)으로 관리 강화

-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대상 사업의 1/3에 대해 실시중인 연장평가를 전체사업으로 확대
 - * 다만,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은 평가제외
- 평가중복 방지 및 부처 부담경감을 위해 통합 성과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하되, 보조금법에 따라 별도 평가보고서 등 국회 제출

3

재정사업 심층평가('26.2~)강화

① 다부처·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수단으로서 역할 재정립

- 단기적으로 지출 효율화가 어려운 다부처 사업군, 대규모 사업 등 평가 난이도·중요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평가 추진
 - 다부처 사업군 및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의무지출 사업 중점 검토, 성과검증이 필요한 시범·신규사업도 선제적으로 선정

② 증거 기반 평가 고도화를 위해 평가 방법론 혁신

- (평가주기) 1년 이상의 추적 평가도 가능하도록 과제별로 평가 주기 다변화(現 과제별 평가기간은 8~9개월 내외)
- (자료관리) 자료수집 방식 개선으로 관련기관 협조 유도 및 수집 기간 단축, 자료의 질 제고로 분석 신뢰도·정확도 향상
- (평가내용) 사업 효과성뿐 아니라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 개편 후 재정추계 등 분석 강화로 지출 효율화의 근거 보강
 - 예산 조정, 자원배분 우선순위 설정 등 내실있는 제언 도출

3 후속조치 계획 내실화·구속력 강화로 평가결과 환류 실효성 제고

- (계획수립) 기획처·소관부처 공동으로 구체적 이행과제·후속조치 계획 수립(現 부처 자율 이행계획 수립) 후 관계부처 회의에서 의결
- (이행점검) 사업별 과제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이행점검을 정례화(예: 2년간 반기별)하여 후속조치 계획의 구속력 강화

4

기금평가('26.1~) 신규·강화

※ 별도 발표 예정

2. 성과목표관리

◇ 「1프로그램 1성과지표」 개선, 재정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처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책임성 확보

1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운영 적정성 점검·개선 신규

- 재정성과평가단 점검을 통해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 적용이 부적절한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에 대해 개선조치(6~8월)
 - 세부사업 규모, 사업목적의 이질성 정도 등에 따라 ①별도 성과 지표 설정(소규모/이질성 小) 또는 ②프로그램 분리(대규모/이질성 多)

2 재정정보 확대제공으로 성과계획서 활용도 제고 신규·강화

- 국회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핵심정보 중심으로 성과계획서 개편(4월) 신규
 - 성과계획서에 세부사업 성과지표 등 활용도가 높은 재정정보를 추가하고, 예산심사와 관련성이 낮은 정보는 삭제
-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세부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권고안 제시(6~8월) 강화

③ 성과목표관리 우수부처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강화}

- '25년 신규 도입한 성과목표관리 우수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처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대폭 강화(4월)
 -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우수 프로그램 → 우수 부처 추가)하고, 포상금 수준도 전년 대비 대폭 증액
- * '25년의 경우 표창은 우수부처 및 우수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해 모두 실시하였으나, 포상금은 우수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하여만 지급

3. 성과관리 인프라

- ◇ AI 재정성과관리 도입으로 성과관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정보 공개 확대로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

① 시 기반 성과관리 도입^{신규}

-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하는 재정성과관리 AI 도입(하반기)
 - AI를 활용하여 반복·정형적 업무 자동화(분류, 지표 검토 및 대안 도출, 유사 프로그램 및 전년대비 비교 등 기초자료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자는 정책적 판단에 평가역량 집중
- '2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검토시 실효성 검증(8월~), 검증결과를 토대로 '27년 이후 기능 보완 및 성과목표관리 검토 업무에 전면 도입('27년)

② 성과목표관리 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강화^{신규}

- 열린재정 포털에서 부처별 성과목표관리 결과의 주요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공(8월)^{신규}
 - * 현재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텍스트 기반 자료로 정보가 여러 페이지에 분산되어 가독성이 낮음
 - 부처별 임무-전략목표-프로그램 성과목표 및 달성도를 단일 화면형 콘텐츠로 구성하여 공개*
 - *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는 폐지하고, 부처별 성과목표관리 시각화 자료로 대체